27개 시·군·구 균형발전·미래산업 육성 본격화

전남도, 통합 준비 작업 행정력 집중
조직·재정·사무 통합…권한 이양 속도
특별법 실행 방안 시행령 제정 박차
2028년 'G20 정상회의' 유치도 추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남도가 27개 시·군·구 균형발전과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통합 준비 체계에 돌입했다.

전남도는 2일 "오는 7월 대한민국 제1호 광역통합 선도모델로서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을 위해 모든 행정역량을 총결집해 통합 준비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먼저 행정 통합의 안정적 이행을 위해 기존 '행정통합추진기획단'을 '행정통합실무준비단'으로 전환하고 광주시와 공동으로 조직·재정·사무 통합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달부터는 관련 조직을 국 단위 정식기구로 확대 개편해 중앙정부 권한 이양에 따른 업무 인수 및 제도 정비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방침이다.

특별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제정 작업에도 집중한다.

법률에 포함된 조문과 특례 사항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분야별 조례 제정과 행정시스템 정비를 통해 통합특별시 출범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권한 및 특례 사항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보완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산업 전략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지난 달 23일 '400만 특별시 기업유치 특별 전담반'을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전담반은 권역별 산업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통합특별시 산업 기반 확충을 위한 실행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광주권·서부권·동부권·남부권 등 3+1축 4대 권역을 중심으로 'Y4-노믹스' 비전을 구체화하고, 반도체·인공지능(AI)·로봇·에너지·이차전지 등 미래 첨단산업과 함께 농수축산업, 문화관광산업 등 지역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함께 추진한다.

이와 함께 농·수협중앙회,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마사회 등 주요 공공기관 이전 및 유치 가능성도 검토해 산업 기반 확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국제행사 개최와 문화 인프라 확충을 통해 대외 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

우선 통합 이후 첫 국제행사인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준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섬·바다·갯벌 등 해양자원의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국내외에 알릴 계획이다.

2028년 G20 정상회의 유치를 목표로 관련 준비 절차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회의가 개최되면 광주·전남 전역을 연계하는 분산형 운영 모델을 검토해 지역 전반의 참여 기반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문화 분야에서는 광주 금남로 일대 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문화예술 집적지 조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 평화미술관 건립, 창작 레지던스 구축 등 예술 인프라 확충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5·18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문화콘텐츠 개발과 광주비엔날레·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등 기존 국제행사 간 연계 방안을 모색해 문화산업의 확장성과 도시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전남도는 통합특별시 전역의 균형 있는 발전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균형발전기금의 구체적 운영 방안을 수립하고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는 재정 운용 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에너지 기본소득, 출생기본소득 등 기존에 논의했던 정책 과제도 재정 여건과 제도적 타당성을 종합 검토해 단계적 추진 방안을 마련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특별법 통과에 따른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통합특별시 출범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행정적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정 기자

광주시, 행정통합 등 대응 인사 단행

광주시는 지난달 27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3급 2명, 4급 5명, 5급 15명 등 총 99명에 대한 승진 인사를 의결했다. ▶인사 명단 18면

이번 승진 인사는 광주·전남 통합과 통합공항 건설 등 핵심 현안에 선제 대응하고 제50주년 5·18민주화운동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조직 개편의 후속 조치다.

3급 부이사관 승진자는 황인채 시민소통과장, 소진호 비서실장 등 2명이다.

이와 함께 기후대기, 군공항 이전, 도로, 미래산업, 경제 등 광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현안 부서에서 성과를 낸 김영규 기후대응정책팀장, 박용범 산업정책팀장, 장안숙 소비자보호팀장, 김경수 이전사업팀장, 유충석 도로계획팀장 등 5명이 4급 서기관 승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변은진 기자

"마을 풍요·평안 기원" 지산2동 당산제 지산동 발전과 다 함께 행복한 주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16회 지산2동 당산제'가 2일 오전 광주 동구 지산2동 다복마을 사랑채 앞에서 열려 마을의 풍요와 평안을 기원하는 제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영권 기자

각화농산물시장, 35년만에 효령동 일원 이전

광주시, 이전 부지 확정…2036년 완공
통합특별시 농산물 유통·물류거점 기대

광주시가 지난 35년 간 지역 농산물 유통의 중추적 역할을 해 온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을 북구 효령·용전·용강동 일원으로 이전한다.

광주시는 최근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의 이전 부지를 확정하고 2일 북구 각화동 시화문화마을 커뮤니티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유통 종사자,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자유 질의응답과 의견 수렴 등이 진행됐다.

광주시는 시설현대화 용역 결과에 따라 제시된 후보지를 대상으로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했다.

선정위원회는 주요 고속도로와 인접한 접근성(교통), 개발제한구역 활용을 통한 신속성(착공 용이), 정형화된 지형에 따른 확장성이라는 3대 원칙을 최우선 고려해 후보지 중 북구 효령·용전·용강동 일원을 최종 이전 부지로 낙점했다.

교통 요충지인 효령·용전·용강동 일원은 입지 조건이 탁월하며 기존 부지 대비 약 6배 규모인 32만㎡(9만8천평) 부지 확보가 가능해 유통 환경 변화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

광주시는 올해 상반기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공모에 신청할 예정이다. 공모 선정 시 총사업비 3천149억원을 투입해 오는 2036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새롭게 건립될 농산물도매시장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된다. 첨단 유통시스템을 갖춘 종합물류동과 함께 2천대 이상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을 배치해 이용객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국 최대 농산물 생산 배후지를 기반으로 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산물 유통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강기정 시장은 "농산물도매시장 이전은 호남권 농산물 유통의 새로운 100년을 설계하는 역사적인 전환점이자 광주·전남 상생의 공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변은진 기자

전남, '지역사랑 휴가지원' 최다 선정

고흥·강진 등 6개 시·군 확정
관광객 1인 최대 10만원 지원

전남도는 2일 "문화체육관광부의 '2026 지역사랑 휴가지원' 공모사업에 전남 6개 시·군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공모는 전국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남에서는 고흥·강진·해남·영암·영광·완도가 선정돼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실적을 기록했다.

지역사랑 휴가지원은 인구감소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여행 지출 금액의 50%를 모바일 지역화폐 등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다. 1인 최대 10만원, 2인 이상 2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자체별로 국비 3억원과 지방비 7억원을 매칭, 총 10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숙박·음식·체험 등 관광 가맹점 매출 증대는 물론 체류 일수 확대에 따른 생활인구 증가 효과도 기대된다. 사업은 4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강진군이 선도적으로 추진해 전국적 주목을 받았던 '반값여행' 정책을 정부가 제도화한 것으로 전남이 지역관광 활성화 정책의 선도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남도는 이번 사업을 '2026 전남 섬 방문의 해',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와 연계해 섬·해양 특화 체류형 관광상품을 확대하고 재방문과 장기 체류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관광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재정 기자